

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정책토론회 토론문

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

※ 아래 토론문은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종 대전시책에 대한 이런저런 일반적인 문제인식을 나열한 것이며, 이론적 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둡니다.

1. 지방자치제 및 민선4기 평가

① 지난 지방자치 15년을 평가하면

-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
-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
- 제한된 주민참여
- MB집권 이후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가속화
- 각종 감세정책 및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 부도위기로 내몰림
- 지방자치 제도문제 / 권한, 재정이양 빈곤, 자치입법권 및 인사권 제약

② 민선4기(박성호 대전광역 시장체제) 평가

- 긍정적인 평가
 - + 기업유치,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, 시내버스 노선개편
 - + 비경제가치 중심 시책 / 나무심기, 자전거, 생태하천, 무지개프로젝트 등
 - + 국비지원 확대, 보행환경 개선,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성과
 - 부정적인 평가
 - +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, 로봇랜드 시범사업, 자기부상열차 등 국책시범사업 실패
 - + 본격적인 서남부권 1단계 개발, 무분별한 원도심 재개발 사업
 - + 시내버스 책임경영제, 도시철도 2호선 논란 / 수송효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부재
 - + 3천만그루 나무심기, 자전거타기 / 시민적 공감대 부족
 - + 반 지방의 MB정부에 무기력한 박성호 대전시장 / 행정도시, 수도권규제완화, 지방재정위기
- => 전체적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박성호 대전시장의 리더쉽 문제 드러냄

③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평가

- 잇따른 파행 / 의장단선거, 연찬회, 학원교습시간문제, 해외연수 등
-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 부재
- 최소한의 협상력, 지도력 등 리더쉽 부재
- 전체적으로 자치의정 역량 부재 드러냄

=> 결국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인식 확산(잘한다. 11.8%에 불과, 09년 8월 15일 충청투데이)

2. 4대 지방위기 넘어서는 민선5기

- ① 신 중앙집권
- ②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악화
- ③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도시 백지화 및 혁신도시 위기
- ④ 행정구역개편 논란 / 지방자치 부정

3. 민선자치 5기 8대 과제

- ① 고용, 교육, 보육,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 해결 약속
- ②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약속
- ③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위한 정책 약속
- ④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약속
- ⑤ 수도권과밀문제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
- ⑥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약속
- ⑦ 부정부패 척결 약속
- ⑧ 기타 지역현안 관련 시민과의 약속

4. 민선자치 5기 10대 과제

약속1 / 고용, 교육, 보육,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 해결 약속

- ① 문제진단
 -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동서격차 또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악화되고 있음
 - 특히, MB정권 집권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방복지 또한 위기에 봉착
 - 고용율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지수는 낮은 편
- ② 대안제시
 - 우리사회의 해결해야할 과제인 사회양극화 둔산개발을 시작으로 대두된 동서격차 극복 공약
 - MB정권 집권이후 외면받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확실한 공약
 -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
 - +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2010년 대전시 경제과학국 예산 감소
 - +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국 등 정무분야 총예산은 확대편성
 -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조례개정 및 전면실시를 위한 토대 마련
 - 방과후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제시 등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
 -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증장기계획 수립 등 시민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약속2 /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약속

① 문제진단

- 박시장 체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통부재로 말미암아 행정력 낭비
- 전임 시장체제하의 각종시책에 대한 부정(복지만두레,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)
- 리턴매치 그래서 우려
- 시민과 호흡하는 단체장, 지방의원 리더쉽의 아쉬움
-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출문제 / 최소한의 리더쉽, 정치력, 지도력, 합의력도 찾기 힘들

② 대안제시

- 시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 구현
- 독선(아집)보다는 지역역량(좋은 자본)을 활용한 통합의 정치력 발휘
- 기존 시책가운데 좋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정치적 포용력을 약속
-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지방자치 구현 약속

약속3 /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약속

① 문제진단

- 주거, 교육, 교통, 환경 등 대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음
-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동서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실효성 의문
- 서남부권 개발과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은 동서격차 부채질하고 있음
- 동서격차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예산확보,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

② 대안제시

- 동서격차 해소 위해 무분별한 서남부권 개발 및 도심재개발 사업을 전면중단할것 공약
- 동서격차 해소 위한 기존 각종 중장기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
- 주거권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심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
-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및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무지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약속
- 교육격차해소위한 동부지역 교육시설 대폭 확충 약속

약속4 /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약속

① 문제진단

-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총 96조1천억원 세수감소 예상(국회자료)
- MB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고사위기
- 지방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예산 및 경제과학 분야 예산을 축소편성
- 2012년 대전시 지방채 1조시대 개막, 미지급금 포함 매년 3천억원대 지방채 발행
-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부채질하고 있음
- 대전시, 교육청, 5개구청 등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눈치만

② 대안제시

- MB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
- 각종 감세정책 및 4대강 사업추진에 대한 범시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
- 범 지방과 연대하여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분일으키고 극복방안 모색
- 토목건축 관련 일변도의 대전시 예산편성보다는 사회복지, 경제과학분야 예산의 대폭 확충
- 수목원 남문광장 그늘막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 전면 재고 약속
- 지방정부 재정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관변단체 보조금 등 불필요한 예산 전면삭감

약속5 / 수도권과밀문제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

① 문제진단

- MB정부 세종시 수정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꼼수
- 행정기능이 배제된 수정된 세종시가 추진된다면 지역블랙홀, 지방블랙홀이 될 것
- 수도권과밀문제해소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도시는 반드시 원안 추진되어야 함
-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범 지방 차원의 대응도 요구됨

② 대안제시

-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 재차 약속
- 반 지방 위기에 할 말하는 주민대표가 될 것 약속
- 지방분권, 분산, 균형발전 정책 재추진 약속

약속6 /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약속

① 문제진단

- 지방의회 재량권 미흡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주민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주민참여제도 마련되어야 함
- 의회 책임성 높일 수 있는 제도미비

② 대안제시

- 기득권을 버리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 구현 약속
- 주요 정책결정 관련 청문회·공청회 제도의 도입 약속
- 의회 사무처 독립성 강화(사무처 인사권 의장에게 부여, 인사위 설치)
- 전문위원 대폭 확충(1~2인으로는 행정업무처리에 급급한 실정, 입법활동 전문적으로 지원)
- 단체장의 주요 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부여(인사전횡 예방차원) 약속
- 의원 유급제와 의정비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겸직겸업 금지 약속
- 현행 헌법하에서의 조례제정권 확대
-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개선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공청회제도 도입(주민의견 수렴)
-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(책임있는 의정활동위해 국회처럼 전자투표와 표결실명제 도입)
- 의장선출방식 전면개정(이미 도입하고 있는 곳 많음) 약속

-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약속(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 참여 활성화)
- 특히 주요위원회(도시계획, 건축위원회 등)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보장 약속
- 각종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여성참여(예시, 30%) 보장 약속

약속7 / 부정부패 척결 약속

① 문제진단

- 공무원 부정부패를 비롯해 각종 뇌물수수과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
- 2004년 하반기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497명에 달함
-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뇌물수수, 향응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%, 70%
- 교육청은 58%가 공금횡령으로 나타남

② 대안제시

- 시, 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약속
- 부패방지위한 주민감사관제 도입 약속
- 각종인허가 관련 처리절차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약속
- 솜방망이 처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등 확대개편

약속8 / 기타 지역현안 관련 시민과의 약속(생각나는대로)

- 도시철도 2,3호선 문제 및 시내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혁
-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
-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
- 무지개프로젝트 사업
- 도심 재개발 사업에 주민이 없다!
- 대덕구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없다.
- IT거리, 과학거리 -> 첨단과학도시에 첨단이 없다
- 과학(연구단지) 오래 길
- 견우와 직녀(구지하상가와 신지하상가 연결)
- 냉난방이 되는 버스 승강장
- 전봇대 없는 도시
- 영구임대주택의 변신(관련법 개정추진)
- 시립병원(공공병원)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및 서민의료비 지출 최소화
- 서민생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친서민정책의 추진
-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보전할 수 있는 사업
- 지역 복지관을 예산 및 사업비가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예산에 휘둘리지 않게 안정장치 마련
- 여성 일자리 및 저소득층 일자리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법지양
- 일정 비용 이상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제도 도입